

# 오리산업의 당면문제와 해결방안은?



**김재민**  
축산경제신문 기자

국민총생산액 중 농업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축산업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져 이제는 정부 정책의 중심도 축산업 쪽에 더욱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농업부 분 주요 10대 품목에 한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에 이어 오리까지 편입되면서 그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축산업이 농촌경제의 버팀목 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일반 경종 농업, 그 중에서도 쌀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개방논의가 있을 때마다 축산업은 늘 개방 의 선봉에 서야하고 지원책에서도 늘 뒷전에 있다는 게 축산업계의 중론이다.

경종농업과 축산업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축산업 내 에서도 정부 정책 및 지원의 편향성은 그대로 드러 나는데 정부의 지원이 이른바 4대 축종인 한우, 낙

## 원활한 오리의 수급조절 위해 가축통계 편입 필요 종오리 DB사업 오리수급조절 위한 현실적 대안 DB사업 통해 종오리 등록, F1오리 생산 근절 유도해야

농,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에 편중되다 보니 4대 축종 이외의 축산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산액이 많거나 종사자가 많은 쪽에 정부의 관심이 기울어 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먼저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수준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계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상대적 박탈감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 가금수급위 폐지 후대책은 무엇인지.

올해 정부는 가금수급위 폐지를 공식화했다. 가금수급위에 참여하고 있는 양계협회를 비롯 계육협회, 오리협회, 계란유통협회, 치킨외식산업협회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학계까지 수급위 존치를 주장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러한 업계의 수급위존치 주장은 정부가 제공한 시드머니에서 발생하는 자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가금업계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금산물의수급조절과 필요를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폐지를 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와 지원계획을 먼저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폐지 의사를 밝힌지 10여 개월이 지났지만 가금업계에 어떤 손짓도 대안도 내 놓고 있지 않다.

### 종오리 DB사업 오리산업 근간 다시세울 기회

늘어나는 오리 수요에 비해 육용오리를 공급할 수 있는 종축산업이 후퇴해 있는 관계로 오리업계는 원종오리사업(GPS)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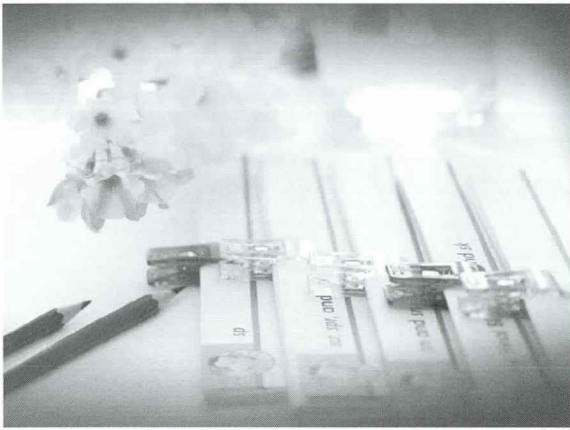
프랑스와 영국 등을 통해 종오리(PS)의 공급받고 있는 국내 오리 업계는 필요한 종오리에 비해 수입양이 적다보니 종오리 배정과정에서 늘 마찰을 빚고 있고 종오리 공급을 받지 못한 일부 농가의 경우 상당수의 육용오리를 실용오리(F1)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축산법상 종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F1인 실용오리에서 종란을 생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종오리의 수급이 원활치 못하고 산업의 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F1에서의 오리 생산은 일반화되어 버린지 오래다. 오리업계의 GPS사업 추진은 종오리 공급에 숨통을 어느 정도 트여 주겠지만 추진초기단계인 관계로 아직도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문제는 F1을 통한 오리생산이 일반화되면서 오리협회가 적극추진하고 있는 종오리DB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가금수급위 자금을 통해 사업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오리협회는 자금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농림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담당자들은 F1에 의한 오리생산이 일반화돼 있는 상황에서 종오리DB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종오리의 사육수수와 생산된 오리알 숫자를 통계화함으로써 생산량을 예측하고 수급을 조절 및 각종 사업을 위한 통계자료로 가공하겠다는 입장을 오리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종오리 공급부족으로 촉발된 F1을 통한 오리생산이 도를 넘으면서 이제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만 것이다.

정부담당자는 종오리DB사업 추진 이전에 F1에 의





한 오리 생산 실태부터 먼저 파악하고 등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종오리농장과 부화장의 등록을 마무리 지어야 DB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사견임을 전제로 밝히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종축에 대한 DB사업을 먼저 시작한 양계업계에 있다. 양계업계는 종계DB사업 준비과정에서 상당수의 무등록 종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슈로 떠올랐다. 무등록 종계장의 실태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기가 돼왔지만 GPS농장의 분양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무등록 종계장이 드러나게 됐고,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는 무등록종계장의 DB사업 제외는 물론 폐쇄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무등록 종계장도 DB사업에 참여 시키되 점차로 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했다.

오리산업도 이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F1에서의 오리생산 농가도 있겠지만 종오리의 수급이 원활치 못한 가운데 자행된 부분도 있는 만큼 이러한 F1종오리농장도 DB사업에 참여시키되 F1종오리 입식을 줄여나가고 종오리(PS)사육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라 본다. 어차피 F1에서의 산란율과 부화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볼 때 이들 농가들이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님을 감안해 점진적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종오리농장의 등록도 함께 추진한다면 종오

리DB사업을 통해 오리산업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리산업 가축통계 편입 필요

이와 함께 현재 비육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가축통계에 오리산업까지 편입시켜 사육주기가 짧아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산업을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생산주기가 긴 소와 돼지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은 가금류는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 단 시간 내에 사육수수가 급격히 늘 수 있고 단시간 내에 사육수수가 줄어들 수 있는 특징으로 상시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5%만 남아도 가격이 폭락하고 5%만 모자라도 가격이 급등하는 농축산물의 특성상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축통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서 오리협회가 종오리DB사업 추진에 올인 하는 이유도 분기마다 발표되는 주요축종에 비해 연간 1회 발표되는 통계 가지고는 수급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하는 가축통계를 이용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각 축산품목별 관측자료를 생산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고 있지만 오리산업의 통계미비는 산업의 전망마저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오리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축통계의 필요성은 제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앞서 적은 비용으로 가축통계 못지않은 효과를 내고 있는 종오리DB사업에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오리협회가 종오리DB사업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요청한 자금은 기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F1오리생산 근절 종오리농장 등록 등 산적한 현안도 해결해야겠지만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 DB사업을 통해 F1오리생산 근절과 종오리농장 등록 유도의 당근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정부 담당자들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